

# FTA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 대응 방향

## - 한·미/한·EU FTA를 중심으로 -

김양중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I. 서론

#### 1) 필요성 및 목적

세계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사자성어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말인 것 같다.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는 물론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악재는 세계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동반적 위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아울러 FTA라는 또 하나의 변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FTA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즉 정부는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홍보하고 있지만 내포되어 있는 위험도 만만치 않다. 둘러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농어업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 된지도 어느덧 7년이 지났다. 그 이후에도 한·EU FTA 등 6개의 FTA가 발효되었고, 결국 한·미 FTA 비준도 통과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 동안 농어민들은 FTA에 반대하면서 투쟁은 물론 나름대로 대응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년이라는 세월 속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정부의 수많은 약속과 대응하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는가? 이 물음에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그동안 지원책의 문제점과 충남 농어업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북·충남·전남 등 농어업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시장개방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충남은 농어업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 충남의 농어업 교역규모

〈표 1〉 충남의 수출입 현황(2010)

(단위 : 백만불)

대륙	총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아시아	46,829	38,278	8,551	29,726
중동	11,158	1,440	9,718	-8,278
유럽	8,112	5,704	2,408	3,296
EU	6,350	5,065	1,285	3,779
북미	6,309	4,858	1,451	3,407
중남미	4,072	3,232	840	2,391
아프리카	377	236	141	94
대양주	2,088	306	1,782	-1,477
기타지역	1	1	0	1
계	78,946	54,055	24,891	29,16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0년 기준 충남은 타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291.6억불)를 기록하였고, 특히 북미와 EU 지역에서는 각각 34.1억불, 37.8억불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농어업 교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충남의 2010년 농어업 총수출은 2.8억불, 총수입은 9.2억불로 6.3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적자폭이 가장 컸으며 축산물, 수산물 순으로 적자폭이 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한·EU FTA는 충남 농어업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표 2〉 충남 농어업 수출입 현황(2010)

(단위 : 천불)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농산물	205,776	704,699	△ 498,923
축산물	56,311	162,850	△ 106,539
임산물	1,114	13,897	△ 12,783
수산물	19,012	34,485	△ 15,473
총계	282,212	915,932	△ 633,7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특히 충남이 전체교역에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업분야에서의 적자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의 피해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 II. FTA가 충남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충남은 대미와 대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충남의 수출확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광·제조업이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46%)이 높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농어업의 경우 피해가 예상되어 정확한 피해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충남의 GRDP 대비 농어업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과 농어업의 비중

(단위 : 십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GRDP	47,497	51,361	55,148	57,974	65,760
농어업 비중	(7.15%)	(6.64%)	(5.83%)	(5.52%)	(5.11%)

자료 : 통계청(KOSIS), 주: ()는 전체 GRDP 대비 구성비임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는 축산분야이며 과수, 원예, 곡물, 수산, 특작 순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의 경우 양돈, 한육우, 양계 순으로 피해가 예상되며, 과수의 경우 배, 사과, 포도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EU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 역시 축산분야이며 원예, 수산, 과수, 곡물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 FTA 이행시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발효 후 15년까지 연평균 1,1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한·EU FTA로 인한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25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한·EU FTA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액 중 90% 이상이 축산분야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실액만을 보고 손실액만을 보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액은 예측일 뿐이다. 손실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로 인한 농어민들의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 III. FTA 농어업 대응방안

본 글에서는 FTA 농어업 대응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요구사항과 충남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다.

(표 4) FTA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요구사항 및 충남도가 해야 할 일

구분	내용
중앙정부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전직불제의 자격요건 완화 및 확대</li> <li>○ 농어촌 고령화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li> <li>○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강화</li> <li>○ 보완대책 마련 시 포괄보조 예산 배정</li> <li>○ 추진사업의 지자체 보조비율 축소</li> </ul>
충남도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 확보</li> <li>○ FTA 가용예산 확보</li> <li>○ 충남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li> </ul>

먼저 중앙정부 요구사항이다. 중앙정부는 첫째, 피해보전직불제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한 사례가 전무하다. 보여주기 위한 제도는 농어민들에게 의미가 없다. 보다 실효성 있고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후계농업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농어촌의 고령화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후계농업인 육성은 급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계농어가의 폐업 및 전업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폐업 및 전업은 반드시 농어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체작목 발굴 등 지원을 위한 지역별 갱생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완대책 마련시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예산의 배정과 추진사업의 지자체 보조비율 축소이다. 지자체의 재정과 특성을 반영하여 일괄적인 매칭비율을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충남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먼저 중앙정부와의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충남도만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용 가능한 자원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충남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매칭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충남도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IV. 충남도 농어업 지원 로드맵

이제 충남이 FTA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그동안 충남은 물론 타시도에서도 FTA 대응을 위한 많은 지원책을 발표하고 그 지원책에 대한 홍보에 여념이 없

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농어민들이 그 지원책에 만족했는가?”라고 지자체에게 묻는다면 어느 지자체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여 충남의 지원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FTA 농어업 지원 로드맵

<b>1</b>	<b>도차원의 가용예산 확보</b>
↓	- 예산의 확보와 별도의 기금마련을 위한 방안 강구
<b>2</b>	<b>타깃농가의 선정</b>
↓	- 정확한 지원타깃 농민과 품목을 선정
<b>3</b>	<b>목표시장의 의견수렴</b>
↓	- 타깃시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지원 가이드 작성
<b>4</b>	<b>의견이 반영된 대응사업 개발</b>
↓	- 구조조정,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등 대응사업 개발
<b>5</b>	<b>지원의 한계 등 평가보고서 작성</b>
	-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했던 사업 - 농어업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실행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업 정리

첫째, 도차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매칭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확한 지원타겟 농어가를 선정해야 한다.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농어가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의 폭을 선정해야 하는 어렵고도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타겟 농어가가 선정되었으면 목표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넷째, 그리고 농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응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구조조정, 피해보전, 경쟁력강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건 반드시 중앙정부 지원책보다 지역현실을 더 잘 고려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잘 정리하고 문서화하여 한·중 FTA, 한·일 FTA 등 향후 다가올 FTA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한 후에 충남만의 한계에 직면한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는 내야 한다. 충남 농어민들의 목소리는 전달해야 한다. 이득을 얻은 기업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농산물 소비자인 우리들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 더 애착을 가져야 한다. 이제 농어민들, 우리 농산물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

### V. 결론

중앙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FTA는 우리나라에게 이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FTA로 인해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농어업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FTA로 농어업은 물론 자영업,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이 무너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FTA 피해 및 취약계층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한·미/한·EU FTA로 인해 충남 제조업에서는 연평균 9,494억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고 농어업에서는 연평균 1,415억원의 피해만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산술적으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이 충남의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다. 농어업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이 집중해왔던 기업유치, 지역개발 등에서 한번쯤 우리의 농어민들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FTA의 시작이다. 한·미/한·EU FTA는 본격적인 FTA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분명히 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모두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나라 농어업의 몰락에 핑계를 댈 수는 없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충남은 FTA의 높은 파고 속에서 농어업을 살려야 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정책시행대에 놓여있다. 지금부터라도 충남은 생각에 대해 실천하는 모습을 농어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충남은 부정할 수 없는 농업도이다. 농어민들과 충남도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